

미얀마의 新경제정책(수지노믹스)과 한국기업 시사점

조대현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chodh@posri.re.kr)

목차

1. 수지노믹스의 개요 및 내·외부의 평가
2. 수지노믹스의 新핵심정책
3.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유망분야
4. 한국 기업 진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Executive Summary

- 지난 4월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7월 29일, ‘민족화합에 기반한 균형성장’을 목표로 12대 어젠다로 구성된 향후 5개년 경제정책(수지노믹스)을 발표
 - 12대 어젠다를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민영화·세금정책 개선 등 정부 내부 개혁, ▶인적자원 개발·일자리 창출·농업발전 등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개발·균형적 산업화·FDI환경 개선 등 사업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 방향 제시
- 집권당인 NLD의 총선공약과 신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과거 정권과 차별화되는 新핵심정책 파악 가능
 - 민간정부 주도 체제 구축을 위해 군부 영향력 하에 있는 광산업 및 국영기업 개혁과 세금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e-Government 시스템 도입
 - 지지층인 노동자·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조건 개선, 농민의 고부가 곡물 생산 지원과 농업전용 경제특구(SEZ) 개발 추진
 - 이밖에 FDI 유입 지속 확대와 新심해항만 개발, 수력·천연가스 발전 확대, 4대 경제회랑 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한 산업화 등 추진 전망
- 미얀마는 신정부 출범 및 수지노믹스 발표와 함께 미국의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기회가 발생하는 반면 리스크도 상존
 - 7대 유망분야: ① 농산물 가공·저장업 및 농기계·비료 현지생산, ② 섬유 및 의류: 단순 OEM을 넘어 염색, 원단공장 진출 및 직접수출 추진, ③ 인프라 개발 및 관련 건축자재 생산·판매, ④ 자원개발 (탐사권 확보 중심), ⑤ 식품 가공 및 대형 유통마트 사업, ⑥ e-Government 등 IT기반 사업, ⑦ 의료 및 교육 부문
 - 4대 리스크: ①신정부와 군부·소수민족간 갈등 따른 정치혼란 가능성, ②임금 상승 및 NGO 영향력 강화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 ③재정 취약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및 재정확보 위한 신조세수단 도입 가능성, ④ 인프라 취약
- 한국기업은 단계별 접근, 국내외 금융 및 정부기관의 인프라 펀드 활용,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통한 진출로 리스크 대응 필요
 - 한국정부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개발연구원(MDI) 통한 정책개발 참여 확대, 한국기업 전용 공단 및 SEZ 개발 참여,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지원 필요

1. 수지노믹스의 개요 및 내·외부의 평가

- 문민정부 출범 4개월 만인 7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공식 경제정책 발표회를 통해 향후 5개년 경제정책 발표
- ‘민족화합에 기반한 균형성장’을 목표로 12대 정책 어젠다로 구성
 - 수지 여사는 경제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신정부는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12대 정책 어젠다를 통해 ‘정부 내부 개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업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 방향’ 제시
 - 정부 내부 개혁을 위하여 ▶투명한 재정운영 체제 구축, ▶국영기업 민영화, ▶공공시스템 디지털화, ▶공정한 조세체제 구축 추진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 ▶농업발전 기반의 균형적 산업화 추진
 - 사업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인프라개발, ▶FDI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환경 개선, ▶친환경 지역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통한 선진기술 개발 강화, ▶외국과 경제교류 확대 제시

〈12대 정책 어젠다〉

어젠다	주요 내용
투명한 재정운영 체제 구축	- 기존 제도·정책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개방적 재정체제 구축 - 자원 채굴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국영기업 민영화	- 책임경영 체제 도입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필요 시 민영화 통한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공공시스템 디지털화 및 인프라 개발	- Data ID Card 시스템, e-government 시스템 등 도입 -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
공정한 조세체제 구축	정부 예산 확대를 위한 공평한 조세정책 시행
인적자원 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하여 전국에 학교, 학원 신설 및 개선, 해외 유학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국내 및 해외 거주 노동자들을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
농업발전 기반의 균형적 산업화	- 농업과 제조업의 균형 발전 - 수출 산업 육성

FDI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 창업지원 및 숙련 노동력 제공 - 법률에 기초한 사업환경 조성 통한 투자 안정성 보장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 노동법, 투자법 등 제도 개선
금융환경 개선	- 금융부문 독립성 강화 - 소액대출 활성화 - 외국 보험회사 진입 허용 - 모바일 banking 개발 및 상용화
환경·지역문화 보호 기반의 지역 개발	- 환경 및 지역문화 보호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 추진 - 공원, 운동장 등 공공 편의시설 조성
선진기술 개발 강화	선진·신예 기술 개발 장려 및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과 경제교류 확대	빈곤 탈출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ASEAN 및 역외 국가와 적극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

자료: Kotra 및 인터넷 검색, 저자 정리

- 수지노믹스는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불과 3페이지 분량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우선순위 등 부족하다는 의견 공존
 - “전력, 인프라 개발, 농업, 광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중요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발할 것이다” (Sunil Seth, Tata group 미얀마 총괄)
 - “모든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선 순위가 없다, 너무 일반적이라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Wait and See이다” (Soe Tun, 미얀마 양곡 협회 부의장)
 - “금번 정책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계획 등이 부족하다” (Reuters)

2. 수지노믹스의 新핵심정책

- 간결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당인 NLD의 민간정부 주도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내부 개혁과 경제개발 방향을 읽는 新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를 가짐
- 수지노믹스의 기반이 되는 신경제정책과 총선공약 및 신정부 출범 후 정책 등을 종합해 파악된 향후 미얀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은 아래와 같음

① 천연자원 채굴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추진

- 소득수준이 낮고 정부와 분쟁 중인 소수민족 거주지(중국, 인도, 태국과의 국경지역)에 천연자원 다수 분포. 반면 대부분의 광산이 군부 소유이거나 군부와 연계되어 있어 부정부패 발생의 대표적 분야
 - 대표적 광물인 옥(Jade)의 경우 생산 규모가 U\$300억 이상이며, 법정 세율은 법인세 20%, 거래에 따른 상업세가 10%이나 부정부패로 정부의 세금 징수 규모는 1.2%에 불과 (Global Witness, 로이터, 2015.)
- 정부는 광산업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자원 소재지 소수민족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EITI 표준 도입 추진
 - EITI(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는 천연자원의 허가권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천연자원 수출에 따른 외화소득의 투명성 및 세수 체계의 명확화 추진
- 미얀마 자원환경부는 광산업에 대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비취 및 보석류 채굴 허가권의 갱신 중지를 발표 (7.25.)

② 국영기업 개혁 및 민영화

-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적자상황이며, 수익을 내고 있는 일부 분야(채굴업 등)도 자금활용이 불투명한 상황
-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업화(Corporat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유지 중에서 결정할 계획
 - 기업화 또는 민영화 예상 분야: 정보통신, 항공 및 내수운송, 일부 국영은행(중기)
 - 국영기업 유지 예상 분야: 철도, 오일 및 가스 분야

③ 세금정책 개선을 통한 공공투자 재원 확보

- 현재 미얀마 정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GDP의 5% 미만에 불과
- 이에 따라 세율의 단순화, 관리역량 강화 등 세금정책 개선으로 중소기업·농업·가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 자금지원과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사업 자금조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구할 계획

④ 빈곤 및 소득불균형 해소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해외 노동자 복귀 지원

- 대부분의 일자리는 SEZ(Special Economic Zone)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적용을 강화할 방침

⑤ 공공시스템의 디지털화

- 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e-Government 체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법적 자의성 및 독단적 의사결정 제거 통해 부정부패 없는 개방된 정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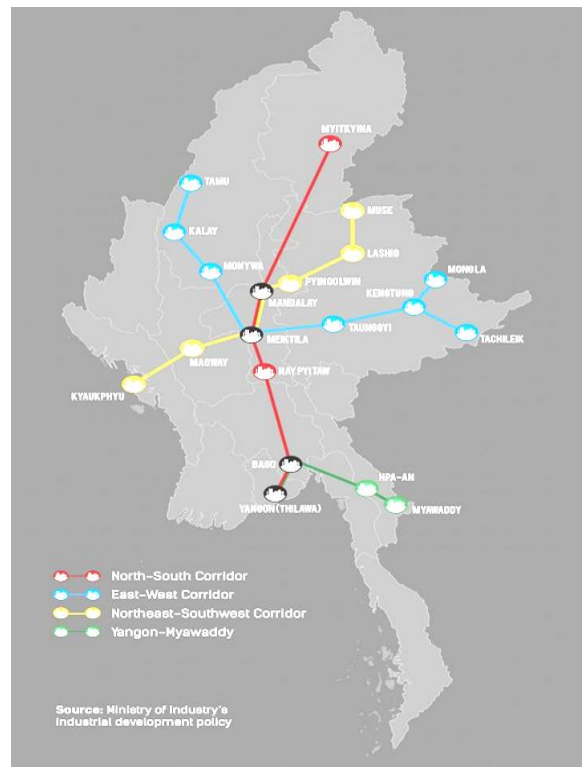
⑥ 포용성장, 식량안보, 수출확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농축산업 발전

- 농산물 생산의 자율권 보장, 자금지원 확대, 토지 소유권 강화
 - 특히 군부정권 시절 군부에 의해 강제 수용된 토지의 반환 추진
- 정부는 고부가 곡물·축산물 생산 중점 지원
- ‘농업 전용 SEZ’ (Special Agricultural Industrial Zones: SAIZ) 개발 추진
 - 사가잉, 바고, 마그웨, 아예야와디, 타닌타리 지역 대상

⑦ 항만, 친환경 전력, 경제회랑 개발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

- 기존 짜욱퓨, 다웨이 등의 심해항만 개발과 함께 신정부는 새롭게 ‘파테인’과 ‘예’에 신규 심해항만 개발 계획 발표 (미얀마 산업부, 6.24.)
 - 파테인 항만: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선박 대응 목적
 - 예 항만: 태국항 선박의 중간 기착지
- 수력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 중심으로 현재 발전능력 2.7천MW에서 2030/31 회계연도까지 22.7천MW로 확장 추진 (미얀마 산업부, 6.24.)
- 4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발을 통한 산업발전 및 연결성 확대
 - 북-남, 동-서, 북동-남서, 양곤-만달레이 경제회랑 개발 추진

〈미얀마 4대 경제회랑〉



자료: 미얀마 산업부, 2016.6.24.

⑧ 단계별 산업화 전략 추진

- 농축산어업 및 제조업 발전을 단기, 중기, 장기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국영기업 민영화 및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으로 추진할 계획

〈산업발전의 우선 순위〉

단계	대상 산업
단기	의류, 신발, 포장, 목재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농축산어업 및 관련 가공제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중기	섬유 및 의류 염색, 조선 및 관련산업, 자동차 대형부품
장기	반도체 제조, 의약품 및 화학산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공업

자료: 미얀마 산업부, 2016.6.24.

⑨ 외국인 투자 유입 지속 확대

- 인프라투자 강화, 금융환경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SEZ 중심의 경제개발 추진
 - 이를 위해 투자 안정성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법에 기초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 정책 대안 준비 중

3. 한국 기업 진출 현황 및 유망분야

- 한국은 미얀마 투자 규모(누적 신고금액 기준, 2015.)에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영국 등에 이어 6위에 위치 (미얀마 통계청, 2016)
- 광업, 운수업 중심에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으로 투자 대상업종 확대
 - 누적 투자금액 기준 광업, 운수업, 제조업 등 3대 업종이 각각 U\$36.6억, U\$6.9억, U\$3.7억으로 전체 투자의 97% 점유
 - 2015년 한해 기준으로는 제조업 U\$42백만, 금융 및 보험업 U\$9백만, 부동산업 U\$7백만으로 총 U\$71백만 중 82% 점유

〈한국의 미얀마 직접투자 현황 (2015)〉

(건수, U\$백만)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2015	누적	2015	누적	2015	누적
광업	3	16	1	9	3.24	3,655.08
제조업	50	253	10	87	41.87	370.80
건설업	29	45	13	27	2.09	4.92
도소매업	9	47	5	24	0.91	18.67
운수업	2	18	1	10	0.23	694.69
금융 및 보험업	3	12	1	5	9.00	15.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	37	4	12	7.06	12.12
총계	149	514	52	219	70.86	4,860.29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현지 사업여건은 신정부 출범 및 수지노믹스 발표와 함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가 예상되는 등 해외투자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
- 미얀마는 ‘아세안의 마지막 프런티어’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기회가 존재하며 다양한 유망분야로의 진출이 기대되는 상황

① 미얀마 산업의 근간인 농업 고도화 분야

- 미얀마 정부는 인구의 70%에 달하는 농업 관련 인력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부문 개혁과 현대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비료 및 관련기계의 수입이 증가

추세

- 농산물의 가공 및 저장, 우수한 품질의 종자 보급 및 농기계와 비료의 현지 수출 및 생산 유망

② 섬유, 의류, 신발, 부품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자격 부여(11월 13일 발효)에 따라 봉제업을 중심으로 급속 성장 전망
- 특히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섬유 및 의류 전문 특구(Textile & Garment Special Zones; TGSZ)를 운영할 예정으로 OEM 제조만이 아닌 염색 및 원단공장 진출과 직접 수출 통한 생산-판매 수직계열화 추진 필요

③ 인프라 개발 및 관련 건축자재 생산·판매 사업

- 국민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된 주택 개량 및 신도시 건설, 대도시 공공운송 시스템 개선, 상하수 및 폐기물 처리 부문 등
 - * 특히 양곤 배후도시 개발 추진 예정으로 주상복합 및 국민주택 건설 유망
-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전력, 도로 및 철도, 항만, 산업단지 및 SEZ 등 인프라 개발 사업
 - * 전력 분야는 기존 설비 개선 및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
- 외국인 전용 주상복합아파트 및 호텔업
- 인프라 건설 위한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생산·판매 사업

④ 자원개발

- 광업분야에 대한 투명성 확대로 외국기업의 공식적인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미탐사 또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광산 다수로 탐사권 확보 기회 존재

⑤ 식품가공, 프랜차이즈 및 대형 유통 마트 사업

- 대부분의 식품가공품을 수입에 의존 중
 - * 한국 라면, 과자 등이 인기가 높으나 수입 의존으로 고가에 판매 중
- 향후 까르푸 등 대형 외국업체 진출 예상으로 대형 유통마트 사업 선점 필요

⑥ IT 기반사업

- 신정부 경제정책에 처음으로 포함된 e-Government 부문

- 통신망, 광케이블, IPTV, 별정통신사업 등도 유망할 전망

⑦ 의료분야

- 집권당인 NLD는 신정부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중점 추진 분야로 교육분야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 투입을 공언
-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의료 장비 및 민간병원 분야

4. 한국 기업 진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미얀마 고유의 정치·사회 리스크와 함께 사업환경은 세계 최하위 수준

① 군부 및 소수민족과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

- 50여 년 동안 군부 집권 하에 성장한 정치·경제분야 기득권층과 민간정부와의 갈등 잠재 → 군부의 핵심 이권사업인 천연자원 채굴업에 대한 민간정부의 정책 강도 및 속도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결정될 전망
- 자치권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내전 지속 → 중앙정부의 연방제 유지를 위한 정책 수준에 따라 소수민족과의 갈등 지속 가능성 상존

② 노동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임금 상승 및 NGO 영향력 강화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 집권당인 NLD가 노동자단체 결성 허가, 국제노동기구(ILO) 제도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 공약의 실행을 추진 중으로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부담 증가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 가능성
- 환경 및 현지 주민 이주 등과 관련된 NGO 영향력 강화로 사업지연 위험

③ 국가재정 취약에 따른 파이낸싱 리스크 및 재정확보를 위한 新조세수단 도입 가능성

- 미얀마 정부의 연간 예산('15)은 U\$190억에 불과, 외국인 투자 의존 불가피
- 신조세수단 도입에 따른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투자 진출 비용 증가 예상. 특히 조세 관련 법률의 엄격 적용,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우려

④ 인프라 여건 및 사업환경은 세계 최하위 수준

- 인프라 경쟁력 순위(WEF, '15~'16)는 비교 대상 140개 국가 중 131위

- * 특히 물류 경쟁력 취약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급에 고비용
- Doing Biz. 순위(WB, '16)도 비교 대상 189개 국가 중 167위
- * 특히 계약실행 187위, 투자자 보호 184위로 최하위
- * 전력부족 문제는 현지진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 (한국, 일본 설문결과)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계별 접근, 한국정부 및 국내외 자금 활용,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통한 진출로 리스크 대응 필요

① 단계별 접근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후 단계적 확대
- 개발형 사업은 정부 주도 G2G 사업에서 독자적 사업개발의 B2B로 확대
- 예) 개발형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참여 통한 사업기반과 우호적 관계 형성 후 추가적 제안사업 추진

② 국내외 금융 및 정부기관의 인프라 펀드 적극 활용

- 한국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인프라사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용
- WB, ADB, AIIB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자금 활용

③ 개방형 파트너십 추진

- 인허가, 마케팅 등 현지 사업운영의 리스크 축소 및 효율적 운영 위한 현지 공기업 및 유력기업과의 파트너십 적극 활용
- 기진출 일본 및 아세안 기업 지분투자 등 제휴를 통한 초기 진출 리스크 감소

□ 한국 정부도 기업들의 성공적 진출 및 운영 위한 지원 필요

○ 신정부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 확대

- 한국의 KOICA와 KDI가 지원하는 미얀마개발연구원(MDI) 통한 '한국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책 개발 추진

○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 어려운 한국기업 전용 공단 및 SEZ 개발 참여

- 특히 띠라와 SEZ 개발 위한 항만 및 인프라 건설 참여 추진

○ 신정부의 정책변화 및 신정책, 투자 및 시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지 대사관, KOTRA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강봉주, “미얀마가 직면한 4대 정치·경제 과제”, 국제금융센터, 2015

이은미, “미얀마 신정부 출범과 진출 유망 분야”, 국제무역연구원, 2016

대한무역진흥공사, “미얀마 총선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15

“미얀마 신정부 경제개발 및 기업환경개선 의지 주목해야”, 2016

International Crisis Group, “Myanmar’s New Government: Finding Its Feet?”, 2016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2015 Election Manifesto”, 2015

[홈페이지]

한국 수출입은행 (<http://koreaexim.go.kr>)

미얀마 Ministry of Industry (<http://www.industry.gov.mm/>)

미얀마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http://www.mnped.gov.mm/>)

[언론]

Aye Thidar Kyaw, “IRD aims to end excise tax confusion”, Myanmar Times. 2016.3.31

Aye Thidar Kyaw & Clare Hammond, “Government reveals 12-point economic policy”, Myanmar Times. 2016.7.29

Chan Mya Htwe, “Better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s can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anlyst”, Myanmar Times. 2016.8.4

Clare Hammond, “Revealed: NLD’s economic policies”, Myanmar Times. 2015.8.17

John Draper & Peerasit Kamnuansipla, “Myanmar’s new govt unveils strategy for peace with ethnic groups”, The Nation. 2016.4.1

Khine Kyew, “Thin economic policy may lead to vague actions, Myanmar businesses say”, Myanmar Eleven. 2016.8.3

Kyaw Hsu Mon, “Govt Releases Economic Policy Outlines, Deferring Detail”, The Irrawaddy. 2016.7.2

Kyaw Phone Kyaw, “The NLDs industrial vision”, Frontier. 2016.7.28

Mike Davis, “Reviving a Jaded peace process: Why natural resources must be a top priority in efforts to end conflict in Kachine State”, Myanmar Times. 2016.7.6

Motokazu Matsui, “Myanmar’s new economic agenda short on specifics”, Nikkei. 2016.8.4

Myo Myo, “Myanmar Government Releases Economic Policy goals Without Specifics”, Wallstreet Journal. 2016.7.29

Nike Ching, “With Sanctions Eased, US Sees Economic Potential in Myanmar”, Voice of America. 2016.8.6

Sean Turnell, “Economic reform is a marathon, not a sprint”, Myanmar Times, 2016.8.1

Steve Gilmor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EITI) shines light on resource sector”, Myanmar Times. 2016.1.22

“Government starts SOE review”, Myanmar Times. 2016.5.10

Upendranadh Choragudi, “Deciphering the Economic Policy Statement of the Myanmar Government- Some random reflections”, Mizzima. 2016. 7.30

Win Ko Ko Latt, “Myanmar’s Panlong Peace Conference to Include All Armed Ethnic Groups”, Radio Free Asia. 2016.7.5